

2001년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액 “184억원”

지난해 한해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1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회장 김정)는 2001년 한해동안 협회 회원사로부터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업체 1828개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184억546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50.44%로, 2000년(54%)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피해업체와 피해금액에 있어서는 2000년(860개, 90억 1800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의 SW 불법복제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정부의 SW 불법복제 집중단속이 있었던 1999년(1381개, 175억3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SW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많은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사용한 불법SW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SW 종류별 불법복제 수량을 살펴보면 사무용 SW가 1만1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백신(4691건), 운영체제(3377건), 그래픽(2351건), CAD/CAM(1250건)이 이었다.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비싼 CAD/CAM SW와 그래픽 SW가 각각 67억 5134만원과 43억4098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으며, 사무용(42억1997만원), 운영체제(10억 1682만원), 서버용 SW(6억8063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56억2868만원의 피해금액과 311건의 피해건수를 기록한 서울의 SW 불법복제 현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27억7014만원, 306건), 부산(25억2945만원, 224건), 인천(24억2799만원, 37건), 대구(19억 5493만원, 323건)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협회 김규성 사무국장은 정부의 집중단속 여부에 따라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말 상표등록 총38건...최초상표 · 말표소주 · 말표위스키?

임오년 말띠 해를 맞아 특허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말과 관련해 출원된 상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과 관련해 등장한 최초의 상표는 1953년 6월 18일 강모씨가 소주와 위스키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같은해 8월 8일 등록된 '말표 소주'와 '말표 위스키'.

특허청 관계자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말처럼 힘차게 일어서는 뜻에서 출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지금까지 '말표 신발'을 비롯해 고무장갑 구두약 세제 향수 의류 보석 음료수 등과 관련된 38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가장 최근에 출원된 상표는 지난해 11월 신모씨가 말고기(馬肉)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고수목馬'.

특허청 관계자는 '60, 70년대에는 동물을 소재로 한 상표는 음식류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말은

힘찬 이미지 때문인지 다양한 상품류를 대상으로 상표가 출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반도체분야 미국특허취득 한국, 대만에 크게 뒤처져

반도체 분야 미국특허취득에 대만기업의 특허등록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체상태에 있어 양국간 지적재산권 취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허청(www.kipo.go.kr)은 미국 특허청이 최근 공개한 반도체분야 국가별 특허취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취득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미국특허취득은 대만의 59%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5년간 2953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반면 우리나라는 1741건 이었다.

대만은 99년 759건에 이어 지난해 1135건의 특허를 취득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47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89건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특허등록은 98년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만은 매년 큰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만기업의 경우 자국 특허출원과 동시에 미국특허 출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97년이후 IMF 외환위기로 국내 반도체기업의 해외특허출원이 활발하지 못한것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90년대 후반부터는 DRAM분야에도 주력해 한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가로 올라서는 등 반도체 분야 연구개

발 및 투자에 적극나서고 있다는 점.

특허청 관계자는 "최대 반도체 시장인 미국에서 양국 기업간 반도체 분야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경쟁력이 뒤쳐져 우려된다"며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 등이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기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만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향후 이 분야의 미국 특허취득과 특허전략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월드컵)마케팅 知財權 비상

지난 1일 월드컵대회 조 추첨이 끝나자마자 국내 A사의 포르투갈 지사는 발빠른 '월드컵 마케팅'을 하다가 도중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이 회사의 포르투갈 지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현지 신문에 내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포르투갈 지사 및 한국 본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

FIFA가 선정한 공식 파트너도 아니고 월드컵 조직위의 공식 공급업체도 아닌 A사의 이 같은 행위는 FIFA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당(ambush) 마케팅'에 해당된다는 것이 FIFA의 주장이다. 월드컵대회가 다가오면서 FIFA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나서 세계의 월드컵 마케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FIFA는 최근 국내 모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정, 부당 마케팅 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FIFA와 대회 조직위의 요청으로 최근 검찰과 경찰은 특허청 등 정부기관이 상표위조방지위원회를 설립했고 검찰과 경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착수했다.

문제는 '월드컵'과 관련한 마케팅 활동 가운데 어느 게 제재대상인지가 모호하다는 것.

B백화점은 조 추첨이 끝난 뒤 한국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구공을 백화점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단순' 이벤트를 기획했다가 이를미리 안 FIFA의 제재를 받고 취소하고 말았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FIFA의 공식 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으나 FIFA의 이의제기를 받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최수영 월드컵조직위 지적재산권 담당관은 "FIFA와 공식 계약을 하지 않고는 월드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 사용과 이벤트 개최 같은 월드컵 마케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기업들이 월드컵 이벤트를 벌였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 담당관은 '98년 프랑스월드컵대회 때 3,000여건의 부당 마케팅활동이 적발돼 이중 300여건이 송사로 이어졌으나 FIFA가 패소한 것은 5%에 불과했다"며 "한국이 WTO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감시대상국으로 지목받고 있어 FIFA측도 단단히 베투고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FIFA의 공식 파트너 회사들도 부당 마케팅 사례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자칫 국내업체들이 이전투구를 벌일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과 조직위가 나서 월드컵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BT분야 미국내 특허, 美 대비 "125분의 1"

국내 생물산업분야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미국

에서 취득한 특허건수가 미국의 '12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 등록된 1만4천964건의 생물산업분야 특허 가운데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는 83건(0.55%.7위)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70%(1만4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7.7%(1천153건), 독일 3.3%(498건), 프랑스 2.9%(436건), 영국 2.7%(408건), 호주 1.0%(153건), 중국 0.06%(9건) 등 이었다.

이같은 한국의 특허등록건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125분의 1, 14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는 90년대 초 연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94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6.5건, 98년 이후에는 매년 15건 이상으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의 경우 사상 최고인 30여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간 유전체분야 등의 특허출원 현황을 볼 때 한국은 출원일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최대 14년에서 최저 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질병예방.치료분야 및 식품화학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북한, 지적권 관련 국제조약 잇달아가입

북한이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잇달아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네바대표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 협정'과

‘특허절차 목적을 위한 미생물기타의 국제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가입서를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IPC협정으로 불리는 스트라스부르크협정은 특허에 관한 발명과 기술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71년에 체결됐다. 이 협정의 가입국은 미국, 유럽 각국 및 일본 등 51개국이며 한국은 지난 99년 10월에 가입했다. 이 협정에 규정된 국제특허분류(IPC)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국가는 90여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국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출원 대상국들에게 모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WIPO에 의해 공인된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면 특허보호를 지정한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77년에 체결된 이 조약에는 세계 53개국과 유럽특허기관(EPO) 등 3개 정부간 기구가 가입해 있다. 한국은 지난 88년 3월에 가입했다.

북한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에 한국에 비해 5년이 앞선 지난 74년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실제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출처 연합뉴스

전통주 제조기술, 출원 늘었으나 수준은 저조

최근 전통주가 새로운 대중주로 자리잡음에 따라 전통주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은 늘었으나 기술발전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출원된 전통주 제

조기술 관련 특허는 모두 46 건이었으며 이는 96년 22건, 97년 24건, 98년 44건 등과 비교할 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등록건수는 10건 내외에 머물고 있어 출원기술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내용별로도 최근 10년간 출원된 전통주 관련 특허 266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용재료에 특징이 있는 기술(152건, 57.1%)로 집계돼 대부분의 출원이 단순히 사용 재료를 달리하는 정도의 기술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보여줬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통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기술 개발과 더불어 출원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발효균주의 선발과 제조장치 개발, 보존기술 개선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함께 숙취저하 등 기능성을 고려한 주조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국제 온라인 저작권조약 3월 첫 발효

최초의 국제 온라인 저작권 조약이 3월부터 발효된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전문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 조약 WCT(WIPO Copyright Treaty)이 내년 3월 6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5년전 160개 국에 의해 채택된 WCT는 최근 가봉을 마지막으로 발효에 필요한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비준을 받았다.

1886년 채택된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 베른 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강한 것으로 음악, 영화, 서적, 미술, 문학 작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주내용.

WIPO는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뮤지션과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약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를 준비 중이다.

역시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국등의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사상 최초의 국제 조약인 로마협약을 보강한 것이다.

현재 28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내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WIPO의 카말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음악 파일 등 사이버 상에서의 무단복제가 횡행하는 시대에 별도의 온라인 저작권 조약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두 조약이 발효되면 작사, 작곡가, 뮤지션 등이 별다른 걱정 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창작, 배포 및 작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제이 버먼 회장은 “WCT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를 비준한 30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62건의 농협상표 및 유사상표 도용행위가 적발된 것 보다 늘어난 것이다.

농협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업에 종사 하면서 농협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 농수산물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3월 순천시 해룡면 A농산물도매점은 순천농산물도매장에서 ‘전남농협쌀 도·소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전남농협 농산물 컨설팅’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요구하다 농협에 적발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지봉공사업체인 신안군 안좌면 B칼라 등 4개 업체가 농협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협마크와 농협지정업체라는 문구를 홍보용으로 생활정보지에 게재하다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농협 전남본부 김의진 유통지원팀 차장은 “농협상표 무단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표 무단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무등일보

농협상표 무단 사용 “소비자 현혹”

최근 들어 농협상표를 무단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상표도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통합농협 출범 이후 일부 상인들이 농협마크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올들어 전남에서만 5건, 전국은 70

국·공립대학, 특허권 소유·활용 길 열려

-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 국·공립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던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공립대학이 소유·관리하도록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이 개

정되었다.

- 금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들도 선진국의 우수 대학과 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는 국·공립대학도 연구개발 결과 발생한 특허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게 되며, 특허기술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대학의 연구개발과 발명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특허법은 국·공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특허권을 소유·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
 -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대학의 특허출원·등록실적이 일부 사립대나 정부출연(연)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대학의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국·공립대학에 투입되는 R&D예산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4%(99년, 5744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공립대학의 연구개발성과가 특허권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 * 국립대의 국유특허 등록건수 : 총 14개 대학, 84건(01.11월 현재)
-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공유 특허를 국·공립대학이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국·공유 특허를 소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다.
- 금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대학은 특허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금을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연구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특허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될 경우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술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특허청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 규정 정비 및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미국은 80년에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및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학내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특허출원비용과 업무를 지원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 연구실, 발명교수가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PCT출원의 지정료가 없어진다

- 지정개념 폐지로 PCT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이 지정됨 -

-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 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 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 동 회의에서는 PCT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의 의결로 시행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현재의 PCT출원 비용 중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지정료 약 65만원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 작업반회의 (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 동 회의에서는 지정개념을 폐지하여 모든 PCT출원이 출원과 동시에 전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에서 동 제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후 시행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현재 PCT국제출원시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 하는 6개국 기본 지정료에 해당하는 약 65만원이 지정개념 폐지로 면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정됨으로써 출원인은 PCT회원국 중 어느 나라로도 국내단계로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 금번 회의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PCT동맹총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제안한 PCT개혁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개최되었고 논의된 주요 사

안으로는

- 지정 개념 및 지정료 폐지
- 현행 국제조사보서 작성시에 추가로 국제 조사의견서를 작성하는 확장된 국제조사 보고서 개념의 도입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 PCT 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사항 등이다.
- 상기 의제 중 회원국의 합의에 도달된 사항으로는 지정개념 및 지정료 폐지, 그리고 PCT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 등이다.
- 그러나, 회원국간 가열된 찬반 논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확장된 국제조사보고서의 도입,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등은 내년 4월에 개최될 제2차 PCT 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 금번 회의에 상정된 의제 중 상당부분은 미국이 미국특허상표청내의 PCT 심사 물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이러한 미국측 제안이 PCT 제도를 오히려 복잡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저하시키는 등 PCT 제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측 제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축소를 이끌어 냈다.
- 앞으로 WIPO측은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과정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내년 4월 중에 개최될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 반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 제1차 및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내년 9월 PCT 동맹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입한 중국, 저작권 보호 작 전 돌입

허베이성일대에 불법복제물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말에 발표된 현재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그 단속의 수위가 예년과는 다르게 아주 강하게 실행되고 있다.

예전의 경우 기껏해야 단속 발표후 불법CD 제조 현장이나 몇군데 단속 하던것에 반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불법CD를 공급하는 유통상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그 영향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다.

베이징과 텐진지역의 학원가나 주택가 지역에 밀집돼 있던 판매상들은 특별단속반에 단속돼 대부분이 영업을 정지된 상태이며, 일부 판매상들의 경우 위치를 바꾸어 단속의 철퇴를 피하고 있기도 하다.

텐진남개대학 맞은편에 형성된 불법CD전문판매상들은 모두 단속돼 영업을 정지 당했으며, 업주들은 위치를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거나, 점포를 기타 잡화점이나 옷가게 등으로 꾸며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속 와중에서도 각종 편법을 써서 불법 복제물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게의 외부를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 등으로 개조한 후 가게안에서 음성적으로 복제물을 판매한다.

이외에도 길거리나 버스역 등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중국일반가정에 유선방송 만큼이나 널리 보급된 VCD,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DVD 보급률이 지금까지 정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껏 시장가 10위안에서 거래되던 불법복제물이 자취를 감추고, 장당 70위안에서 100위안을 호가하는 정품CD가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면 향후 VCD나 DVD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 될 것이기 때문이다.

WTO가입 후 산업전반에 걸친 개혁이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현시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라는 과제안에 실행되고 있는 이번 불법복제물의 대대적인 단속이 과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日, 석박사 논문도 특허 인정

일본 특허청은 대학원생이 석사, 박사 논문 등의 형태로 발표한 연구에 대해서도 특허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대학의 젊은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부 과학성과의 조정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학내에서 일단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의 '신규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구 발표 후의 특허 신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